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인도

Republic of India

2022년 8월 19일 | 선임조사역(G2) 김은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3,287천 km ² 	인구 14.1억 명 (2022 ^f)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GDP 3조 2,914억 달러 (2022 ^f) 	1인당 GDP 2,342달러 (2022 ^f) 	통화단위 Rupee 	환율(U\$기준) 73.9 (2021년 평균) 

-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연방공화국인 인도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91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자유화 및 경제 개혁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1991년 이후 평균 약 7%의 고도성장을 지속한 결과, 2017년에는 명목 GDP 규모가 프랑스를 추월하여 세계 6위의 경제대국 진입에 성공하였음.
- 2019년 5월 총선에서 압승한 모디 정권은 하원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되어 정치적으로 안정된 편임.
- 세계 2위의 인구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 영어 구사력(공용어) 및 과학기술 지식을 갖춘 고급 인력 등은 성장잠재력으로 기능하고 있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세력 견제를 피하고 있는 미국과 전략적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중인 신남방 정책의 주요 거점 국가로 부상하였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3. 12. 10. 수교 (북한 동일자 수교)

주요협정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1974), 문화협정(1974), 과학기술협력협정(1976), 이중과세방지조약(1986), 항공협정(1992), 관광협정(1993), 투자보장협정(1996), 형사사법공조조약(2005), 범죄인인도조약(2005), 사증면제협정(2005),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2011), 사회보장협정(2011),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2014),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17)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 출	15,096,302	11,937,316	15,603,258	반도체,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수 입	5,565,259	4,900,716	8,056,034	석유제품, 알루미늄, 정밀화학원료

해외직접투자현황(2022년 3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1,370건, 7,509,904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f
경제성장률	6.5	3.7	-6.6	8.9	8.2
소비자물가상승률	3.4	4.8	6.2	5.5	6.1
재정수지/GDP	-6.4	-7.5	-12.8	-10.4	-9.9

자료: IMF WEO

2022년 경제성장률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전망

- 인도는 2014년부터 집권 중인 현 모디 정부의 시장친화적 경제개혁 정책에 힘입어 7~8%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며 2017년 세계 6위의 경제대국 진입에 성공하였으나, 주요국 보호무역 기조에 따른 수출 부진, 금융권 부실여신 증가에 따른 유동성 감소, 민간소비 둔화 및 세수 감소 등으로 2019년에는 리먼 사태의 영향을 받은 2008년(4.1%) 이후 최저 수준인 3.7% 성장에 그쳤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봉쇄조치(2020.3.25.~5.31.)의 여파로 산업생산, 수출, 소비 등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됨에 따라 2분기 경제성장률이 -24.4%(전년동기 대비)로 급락하였으며, 연간 경제성장률은 역대 주요국 중 필리핀(-9.6%)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낮은 -6.6%를 기록하였음.
 - 2021년에는 백신 보급에 따른 민간 소비심리 회복, 주요국 경기 회복에 힘입은 수출 증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글로벌 대체 생산기지로서의 가치 재부각에 힘입은 외국인투자 유입 및 기저효과 등으로 8.9%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 초에는 코로나19 확산세 감소, 글로벌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2022년 역시 전년과 유사한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과 예상보다 빠른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과 루피화 하락 압력을 가중시켜 연초 기대보다는 소폭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 세계은행의 경우 2022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8.7%에서 8.0%, 7.5%로 두 차례 하향 조정하였으며, 인도 중앙은행 및 ADB 또한 7.8%에서 7.2%로 하향 조정
- EIU는 노동법 개정, 공기업 민영화 등 개혁 노력과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PLI) 등 제조업 활성화 정책이 인도의 중장기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나, 팬데믹에 따른 가계 소비 및 기업 투자 여력 축소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출 축소 가능성 등으로 인해 2023~26년 중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평균 5.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국내경제

인플레이션 대응 위해 4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 인도는 소비자물가지수 바스켓의 약 46%가 식음료 품목으로 구성되어(Fitch Solutions)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는 농산물 수급 상황이 물가수준을 좌우하며, 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원유 수입국(2020년 기준)으로 국제유가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 BP(British Petroleum) 및 EIU에 따르면 인도는 중국에 이어 아시아 2위(세계 21위)의 원유 생산국이나, 산업 발달과 함께 에너지 소비량이 점차 증가하여 원유 수입액이 연간 상품수입액의 약 20%에 달하고 있음.
- 2015년 인도 중앙은행이 중기 물가안정 목표(4±2%)를 도입한 이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 내외 수준을 유지하여 왔음. 인도 중앙은행은 2019년 내수시장 성장동력 약화 우려에 대응하여 총 135bp 규모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2020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충격 해소를 위해 두 차례(3월·5월)에 걸쳐 기준금리를 115bp 추가 인하한 바 있음. 최근까지 기준금리 수준은 2000년(4.25%) 이후 가장 낮은 4.0%을 유지해 왔음.
- 한편 2020년에는 봉쇄조치에 따른 농산물 유통 차질, 인도 동부 지역의 홍수 피해 등으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중앙은행 목표수준을 초과한 6.2%에 달하였으며 2021년에도 국제유가 상승,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 등으로 5.5%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밀·팜오일 등 식품 원자재 가격 급등 및 봄철 이상 고온 현상에 따른 편자브 지방 밀 수확량 감소 등으로 4~6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7.79%, 7.04% 및 6.20%로 인도 중앙은행의 목표치 상단인 6%를 연속 6개월째 상회하였으며(1월 6.01%, 2월 6.07%, 3월 6.95%) 이에 인도 중앙은행은 5월과 6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40bp, 50bp 인상하였음(현재 기준금리 4.9%). 한편, 인도 중앙은행은 2022년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6%에서 5.7%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EIU와 IHS는 인도의 2022년 물가상승률을 각각 7.3% 및 6.5%로 전망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선진국과의 기준금리 차이 감소 등으로 루피화 평가절하 예상

- 인도는 1994년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수출경쟁력 확보, 현지 자본시장 충격 완화 등을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수시로 개입하여 환율 변동에 대응하고 있음. 단, 2020년 12월 미 재무부가 인도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2019.5월 지정해제)하면서 향후 인도 중앙은행의 환율 방어에 제약이 예상됨.
-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도국 시장에서의 대규모 자본 유출 여파로 미 달러화 대비 루피화 가치는 전년 대비 5.2% 하락한 74.1루피/달러를 기록하였음. 2021년에는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등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가 통화가치 절하 압력으로 작용하여 연평균 환율은 73.9루피/달러를 기록하였음. 한편, 2022년에는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신흥시장 자산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여 연평균 환율은 전년 평균환율 대비 5.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EIU).

국내경제

코로나19 대응 지출 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확대

- 인도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 및 징수 효율화를 위한 통합간접세*(GST, 2017년) 도입 등 조세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프라 확충, 농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출, 법인세율 인하(2019년, 30%→22%, 신규법인세 15%) 조치 등으로 인해 매년 GDP의 6~7%에 달하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음.

* 중앙정부 및 주 정부별로 난립한 간접세 항목을 단일세제로 통합한 단일상품서비스세(Good and Services Tax)로 석유제품과 주류 등을 제외한 전 품목에 적용되며, 품목별로 0%, 5%, 12%, 18%, 28%의 5단계로 차등 부과됨.

- 2020년에는 사회취약계층 앞 식료품 및 현금 지원, 중소기업 앞 유동성 공급, 근로자 급여 지원에서 공공 인프라 투자, 핵심산업 육성 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 대책 등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GDP의 약 9%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17.1조 루피)을 시행하였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도 12.8%로 대폭 확대 되었음.

인도 연방정부 예산안(억 루피, %)

구 분	2021회계연도		2022 회계연도
	원안	수정안	
재정수입	178,842	207,894	220,442
조세수입	154,540	176,515	193,477
재정지출	348,324	377,000	394,491
자본지출	55,424	60,271	75,025
재정수지	-150,681	-159,109	-166,120
(GDP 대비)	-6.8%	-6.9%	-6.4%

자료: 인도 재무부, "Union Budget 2022-23", February 2022

- 2021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직접세, 관세, GST 등 세수가 23.8% 증가하였으나, 인프라 및 보건 분야 투자 확대, 고용 창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2020회계연도* 예산안 대비 7.4%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정부 예상치(-6.9%)를 상회하는 -10.4%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임.
- 2022회계연도에는 전년 수정안 대비 4.6% 증가한 39.4조 루피(5,048억 달러 상당)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대중교통 등 국가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본지출 예산(7.5조 루피)을 전년 대비 24.5% 증액 편성하였음. 이는 2021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 인프라 마스터 플랜(Gati Shakti Master Plan)의 일환으로, 운송·인프라 부문의 경우 전년 대비 50.9%가 증가한 3.5조 루피(448억 달러 상당)를 배정하였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f
경 상 수 지	-65,599	-29,763	32,730	-33,422	-50,210
경상수지/GDP	-2.4	-1.1	1.2	-1.1	-1.5
상 품 수 지	-186,692	-157,678	-95,450	-176,721	-198,289
상 품 수 출	332,087	331,272	281,545	402,424	499,958
상 품 수 입	518,779	488,950	376,995	579,145	698,247
외 환 보 유 액	369,798	426,880	542,157	569,889	495,770
총 외 채	543,112	570,697	586,475	653,846	717,722
총외채잔액/GDP	20.1	20.2	22.0	21.5	21.8
D.S.R.	9.5	12.8	21.4	13.9	11.8

자료: IMF, EIU, OECD

경상수지는 2020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불황형 흑자 기록 후 다시 적자 전환

- 인도는 의약품,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등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상품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자동차·전자기기 부품 및 의약품 원료 등 중간재와 원유 등 에너지 수입수요가 커서 매년 GDP의 5~6%에 달하는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대규모 관광수입(2019년 303억 달러, 세계관광협회) 및 IT·SW 서비스 수출(2019년 1,286억 달러, 인도 중앙은행), 세계 1위의 해외근로자 송금액(2020년 831억 달러, 세계은행) 등에 힘입은 서비스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흑자로 상품수지 적자 폭을 일부 만회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0년에는 글로벌 경기 위축 여파로 상품 수출이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연료 수입액 감소, 중국과의 갈등 격화에 따른 대 중국 수입 감소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약 40% 감소하면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21년에는 미국, 중국 등 수출대상국의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상품 수출이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으나,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 수입액 증가,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상품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54%)하면서 상품수지 적자 폭은 예년 수준을 기록하였음. 이는 IT·SW 서비스 수출, 해외 근로자 송금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흑자 폭을 상회하여, 경상수지는 다시 적자 반전하였음.

구분(억 달러)	2018	2019	2020	2021	2022 ^f
상 품 수 지	-1,867	-1,577	-954	-1,767	-1,983
서 비 스 수 지	808	842	871	1,027	1,053
본 원 소 득 수 지	-298	-294	-320	-376	-394
이 전 소 득 수 지	701	731	731	782	822
경 상 수 지	-656	-298	327	-334	-502

자료: IMF, EIU

대외거래

-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수입수요 정상화 등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1.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EIU). 상품수출은 호조를 보일 전망이나, 주요 수출상대국의 성장세가 둔화된 점을 감안할 시 증가폭은 24.2%로서 2021년(42.9%)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한편 IT·SW 서비스 수출, 해외 근로자 송금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및 이전소득 수지 흑자는 중기적으로도 지속되나, 상품수지의 큰 적자를 대응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2023~26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평균 -1.2%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외채상환능력

외채구조와 외환보유액 모두 안정적인 편

- 인도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자본시장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하여 정부 재원을 대부분 국내 채권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정부의 꾸준한 외채관리 노력에 힘입어 경제규모 대비 외채비중 및 외채구조 모두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GDP 및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각각 20%, 100%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왔음.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제규모 및 총수출 규모 감소로 2020년에는 동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경기 회복 추이에 따라 점차 개선될 전망임.
 - * 총외채잔액/총수출(%) : 97.3(2018) → 100.2(2019) → 115.6(2020) → 98.1(2021) → 90.9(2022^f)
- 외채의 약 80%가 중장기 채무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의 만기·금리 등 관리 노력에 힘입어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D.S.R.(%) : 9.5(2018) → 12.8(2019) → 21.4(2020) → 13.9(2021) → 11.8(2022^f)
-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및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힘입어 최근 수년 간 증가 추세를 보여 옴*. 2020년에는 6월 봉쇄령 완화 이후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급증으로 중앙은행이 루피화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화 자산을 대량 매입하였으며, 외환보유액 규모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5,422억 달러(세계 5위)를 기록함. 2021년에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이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선진국과의 기준금리 차이 축소와 신흥국 자산에 대한 매력도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약 1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EIU).
 - * 외환보유액(십억 달러) : 369.8(2018) → 426.9(2019) → 542.2(2020) → 569.9(2021) → 495.8(2022^f)
- 한편,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약 25%(2021년 25.6%, 2022년 전망 28.6%), 월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은 약 6~8개월분(2021년 8.8개월분, 2022년 전망 6.5개월분)을 기록하는 등 외환보유액은 상대적인 기준으로도 양호한 편임.

구조적취약성

역내 경쟁국 대비 인프라 기반 부족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2019)에 따르면 인도의 종합 경쟁력은 141개국 중 68위로 조사되었으나, 전력 및 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인프라 부문의 경쟁력은 103위에 그침.
- 도로 인프라 품질(76위→48위)은 모디 정부 취임 이후 5년 간 개선되었으나, 전력 접근성(105위) 및 식수 위생 수준(106위)은 역내 주요 경쟁국인 베트남(84위, 95위), 인도네시아(95위, 98위), 필리핀(103위, 105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한편 인도 정부는 2021년 8월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골자로 한 가티 샷티 국가 마스터플랜(Gati Shakti National Master Plan)를 발표한 바, 이는 인도 독립 100주년(2046년)을 앞두고 향후 25년 간의 국가 개발 청사진을 구체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대중교통, 수로, 물류 등 7개 분야 인프라 개발 계획으로 총연장 25,000km의 국도 완성, 도시교통 및 기차역 간 네트워크 구축, 고속열차 400량 제조, 산간 지역 인프라 개발 등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2/23년 예산안에서는 동 프로젝트에 2,000억 루피(약 26억 달러 상당)를 할당하였음.

자연재해에 취약한 경제구조

- 인도는 몬순 기후로 인해 강우량이 연중 특정 시기(6~9월)에 집중되고, 취수 가능한 수자원이 인구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관개 및 수리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농업의 GDP 대비 비중이 15.4%(CIA), 농업 인구 규모가 총 근로자의 54.6%(인도 재무부)에 달하나, 관개시설을 갖춘 경작지는 절반(48.8%)에 불과하여 단위면적당 곡물 수확량이 낮고, 사이클론,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고 있음.
- 인도는 통상 강우량이 집중되는 시기 직전인 5~6월이 연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는 3월부터 때 이른 폭염이 시작되어 수도 뉴델리는 4월에 1주일 연속으로 40도가 넘는 등 1901년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높은 평균기온을 기록하였음. 예상치 못한 폭염에 따른 냉방 수요 급증으로 전력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밀 수확량이 예년보다 15~20% 가량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한편 지난 6월 28일 인도 아삼 주를 덮친 홍수로 135명이 사망하고 20만 명의 이재민이 600여 곳의 피난소로 대피하였음. 아삼 주에서는 2022년에만 30여 곳의 지역에서 45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 아삼 주를 흐르는 브라마푸트라 강은 매년 장마 때마다 범람하여 지역 전체의 40%에 침수 피해를 남기는 것으로 알려짐. 무분별한 산지 개간, 강둑 파괴, 불법 채광 활동 및 허술한 제방 건축 등은 매년 되풀이되는 홍수 피해 대응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시카고 대학교 에너지정책연구소(EPIC)에 따르면, 인도는 방글라데시에 이어 대기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쁜 국가임. 석탄 화력발전, 농경지 화전,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대기오염이 유발하는 각종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해 167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됨. 이는 전체 사망자의 약 18%에 달하며 368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분석됨(영국 의학저널 Lancet).

성장잠재력

젊고 풍부한 노동력과 비교적 다변화된 산업구조

- 세계 2위의 인구대국인 인도는 총 인구의 67.0%가 생산가능 인구에 해당함. 특히, 24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43.8%, 14세 이하의 잠재적 노동인구가 전체의 약 1/4(26.3%)에 달하여 '인구 보너스'에 따른 경제성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인도 보건가족복지부(2020.8월) 발표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인도의 인구증가율은 12.5%(2011~21년)에서 8.4%(2021~31년)로 감소할 전망이나, 절대인구 규모는 2031년 14.7억 명 수준까지 증가하여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할 전망이다.

인도의 연령별 인구분포

연령	0~14세	15~24세	25~54세	55~64세	65세 이상
총인구 대비 비율(%)	26.3	17.5	41.6	7.9	6.7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

- ADB에 따르면 인도는 영어 구사능력을 보유한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1990년대부터 IT·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글로벌 기업의 아웃소싱 거점지로 성장하였으며, 비교적 다변화된 산업구조는 대규모 경제와 함께 대외충격 흡수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 인도의 GDP 대비 산업비중(CIA)은 농업 15.4%, 제조업·광업 23.0%, 서비스업 61.5%으로 IT, 금융 및 관광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3차산업 비중이 큰 편임. 한편, Trademap에 따르면 인도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외에도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강, 귀금속, 의약품, 의류제품 등 비교적 다양한 수출품목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됨.

정책성과

제조업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 개혁정책 추진

- 모디 행정부는 2014년 출범 이래 인프라 확충 및 제조업 육성을 토대로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경제 개혁정책("모디노믹스")을 추진하여 왔음.
- 모디노믹스의 핵심 정책인 'Make in India'는 25개 핵심산업의 투자여건 및 제반 인프라를 개선하여 외국인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제조업 부문의 기술경쟁력과 고용 수준을 제고하는 것임. 동 정책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14년 14%에서 2022년까지 2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자동차 및 부품, 항공, 전자기기, 신재생에너지, 식품 가공, 섬유, 화학, 보건·복지 등 성장 가능성이 높고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큰 25개 산업 부문을 육성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한편, 인도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삼아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20년 5월 'Make in India'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Self-Reliant India' 정책을 발표하였음. 동 정책은 ①경제의 퀀텀 점프(Quantum Jump), ②인프라 고도화, ③첨단 시스템 확보, ④강력하고 활기찬 시민사회, ⑤글로벌 공급망에 기반한 수요 창출 등 5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함.
- 생산 연계 인센티브(Product Linked Incentive, PLI)는 'Self-Reliant India' 정책 구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향후 5년 간 인도 내 생산제품 수출액의 4~6% 상당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외자 유치를 확대하는 것임. 2020년 4월 인도 정부는 전자산업에 5년 간 5천억 루피(67.5억 달러 상당)를 지원키로 하고 삼성전자 등 16개사를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11월에는 통신·네트워크, 의약품, 자동차 및 부품, 태양광 모듈, 배터리셀 등 10개 산업에 5년간 1.5조 루피 지원을 약속하였음.
- 이러한 경제개혁 정책과 함께 창업, 건축 인·허가, 납세, 통관 등 사업절차 간소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세계은행이 평가한 인도의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순위는 2014년 142위(총 189개국)에서 2019년 63위 (총 190개국)로, 모디 총리 취임 이후 5년 만에 79계단이나 도약하였음.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등을 통한 투자 유치 확대

- 인도 정부는 2019년 석탄 채굴·판매(100%), 위탁 제조업(100%), 디지털 미디어(26%) 등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2020년 항공산업(여객·화물수송) 앞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 철폐, 방위산업 자동승인 지분율 상향조정(49%→74%), 2021년 보험업 외국인 지분율 상향조정(49%→74%) 등 외국인투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한편, 인도 상공부는 2021년 9월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 정부 및 18개 지방 정부의 중복되는 인터넷 통관 시스템을 통합한 'National Single-Window System'을 개설하였음.
- 인도의 FDI 유입액은 최근 수년 간 증가하고 있으며, UNCTAD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심리가 냉각된 2020년에도 ICT 부문 M&A 등에 힘입어 FDI 유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0.3% 감소하였는 바, 이는 2020년 글로벌 기업들(구글, 쿠팡 등)의 릴라이언스 그룹 소속 회사들에 대한 대규모 지분 인수(280억 달러)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됨.

* 연도별 FDI 유입액(억 달러, UNCTAD) : 399(2017) → 422(2018) → 506(2019) → 641(2020) → 447(2021)

정치안정

높은 지지율 및 여당의 안정적인 의석 확보로 개혁정책 추진 가능

- 모디 총리는 2014년 총선에서 소속 정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연방 하원 의석의 과반(282석/545석)을 차지하면서 집권하였으며, 2019년에도 연합정당(국민민주연합, NDA)이 총선에 승리하여 연임에 성공하였음. EIU는 모디 총리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도, 연합정당의 안정적인 의석 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현 여당이 차기 총선(2024년 5월 예정)까지 정국 주도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의원내각제를 표방하는 인도는 연방 하원에서 과반석을 점유한 세력이 집권당이 되어 총리를 추대하고 있음. 2019년 총선에서는 연합정당 기준으로 연방 하원 의석의 65%(355석/545석), 연방 상원 의석의 42%(102석/245석)를 확보하였음.
- 2022년 2~3월 실시된 5개 주(우타르프라데시, 편잡, 우타라칸드, 고아, 마니푸르) 의회 선거* 결과, 모디 총리가 속한 인도국민당이 4개 주에서 승리하였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모디 2기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의 동 선거에서 인도국민당은 우타르프라데시, 우타라칸드에서 재집권하고 고아, 마니푸르에서는 제1정당의 위치를 확보하게 됨.
* 인도는 연방제 공화국으로 주 의회 선거는 5년마다 직접투표로 실시되며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주 여당으로 집권하고 선출된 주 의회 의원은 입법 및 예산권을 가짐. 연방정부 상원 의원과 인도의 대통령은 주 의회 의원 및 연방직할지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주 의회 선거는 중앙정부의 정책 개발과 집행에 영향을 미침.
- 2024년 총선에서 인도국민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모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의 연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민주주의 수준은 역내 개도국 대비 성숙한 편

- 인도는 1951~52년에 첫 총선이 실시된 이후 대규모 쿠데타 없이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왔으며,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기능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등 정치·행정체도가 비교적 잘 발달하였음. EIU에서 평가한 인도의 민주주의 지수(2021년)는 167개 평가대상국 중 46위로,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말레이시아(39위) 다음으로 높은 순위임. 평가점수(6.91점/10점 만점) 상으로는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분류되었으나, 선거 절차(8.67점), 정부 기능(7.50점)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음.

사회안정

정부 주도 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 지속

- 인도 농민들은 농산물시장위원회 관리 하의 시장(mandis)을 통해 생산물을 판매해 왔으며, 쌀, 밀 등 23개 곡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를 통해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유지하여 왔음. 농업 개혁법안에 따라 향후 농민들은 민간 도매시장에 직접 생산물을 판매하게 되나, 인도 의회가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1년 가까이 수십만 명의 농민이 수도 뉴델리로 연결되는 10여 개의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개혁안 반대 시위를 지속하였음.
- 개혁법안에 최저가격 보장제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대기업과의 가격 협상에서 영세 소농(전체 농민의 약 2/3가 1헥타르에 못 미치는 농지 보유)이 절대적으로 불리함에 따라 농민들은 생계 위협을 우려하여 법안 폐기를 요구 하였음. 시위가 격화되면서 2021년 1월 인도 대법원이 개혁법안 시행 중단 판결을 내리고, 정부도 법안 시행을 2022년 7월까지 18개월 연기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다가 2021년 11월 모디 총리는 농업 개혁법의 폐지를 공표하였음. 이는 농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우타르프라데시, 편잡 주의 지방 의회 선거(2022년 2~3월) 등을 감안한 집권 여당의 정치적 결정으로 해석됨.

계층 및 종교 갈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 상존

-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1947년 공식적으로 철폐되었으나 생활 저변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직 취업·대입 정원 할당제 등 정부의 하층 카스트 우대정책을 역차별로 인식하는 상층 카스트에 의한 갈등 요소가 잠재하는 가운데,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모디 정부 출범 이후 하층 카스트에 대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하리아나 주에서 '공직·대입 등 하층 카스트 우선할당제' 수혜 범위에 중간층 카스트 포함을 요구하는 폭력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2018년에는 '특정 카스트(Scheduled Castes) 보호법' 완화에 반발하는 최하층 카스트의 전국적 시위가 발생하였음. 2019년 모디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공직·대입 정원 할당제 범위를 중·상층 카스트까지 확대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됨.
- 2019년 12월 인도 의회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인접 3국에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로 이주한 이민자에게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그러나 동 개정안이 힌두교, 시크교, 불교, 기독교, 자이나교 등 종교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이슬람교를 의도적으로 배제함에 따라, 무슬림(인도 인구의 약 14% 차지)과 극우 힌두교도 간에 수 차례의 유혈 충돌이 발생하였음.
- EIU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인 인도국민당이 힌두 민족주의 경향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로 인해 종교, 공동체 간 충돌이 지속되는 등 사회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였음.

사회안정

환경·사회 위험 등으로 인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

- Moody's¹⁾는 ESG 요소가 인도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여력 및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낮아 ESG 위험 대응능력이 취약하다고 판단, 인도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Moody's(2021. 11월)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열 스트레스, 물 스트레스,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낮은 소득수준 및 소득격차, 고등교육 기회 불평등 등은 사회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음. 교육, 주거, 보건 등 정부의 기본 서비스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약 15%가 영양 실조에 노출되어 있으며, 영아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편임. 이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은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 기대수명, 교육수준, 1인당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는 UN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순위는 2021년 기준 131위(189개국 대상)로 동일신용등급 국가군(BBB, Fitch) 평균(61위)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지배구조)** 정부의 정책 효율성이 높지 않아 환경·사회 위험 대응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도의 지배구조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함.

1) Moody's Investors Service, "Credit Opinion: Government of India – Baa3 negative", April 2022

국제관계

국경 분쟁 격화에 따른 대 중국 견제 강화

- 인도와 중국은 약 3,500km에 달하는 구간의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통제선(Line of Actual Control)을 사이에 두고 국경 분쟁을 지속하여 왔음. 2020년 5월 라다크 및 시킴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6월에는 1975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인도군 20명, 중국군 4명 추정)가 발생하는 유혈 사태가 빚어지자, 인도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견제가 강화되었음.
- 인도 정부는 무력 충돌 사태 이전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대 인도 투자 제한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무력 충돌 이후에는 틱톡, 위챗 등 중국산 앱 사용 금지, 중국산 부품 등에 대한 우회수입 규제, 중국 기업의 인도 내 투자 및 프로젝트 입찰 제한** 등 대중 규제를 강화하였음. 2020년 11월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인도가 최종 불참한 것 또한 중국 주도의 무역협정에 참여할 명분과 실리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음.
- * 인도 접경국이 기업 인수 등 인도 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의 사전허가를 획득해야 함
- ** 인도 정부·국영기업 발주 프로젝트 입찰에 중국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바이든 정권 출범 후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간 협의회)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2021년 2월 인도와 중국은 라다크 판공湖 지역에서 철군하기로 합의하였음. 이후에도 수차례 군사회담 등을 진행하며 최전선 병력 철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도 정부는 중국이 여전히 분쟁지역에 군사시설을 만들고 병력을 파견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해 왔음.

중국 견제 목적으로 미국 등과는 우호적 관계 유지

- 인도 정부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과 안보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는 2021년 10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한편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동맹체계의 구축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공식 제안하였으며, 인도를 비롯하여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7개국과 남태평양의 피지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임.
- 한편,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바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TPP의 대안으로 일본을 주축으로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한·중·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출범된 바 있음. 미국의 IPEF 제안은 역내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CPTPP에 복귀하기 보다는 IPEF를 통해 새로운 통상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 참여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칠레, 페루, 멕시코, 캐나다

국제관계

- 2022년 5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IPEF 회담에 참석한 모디 총리는 이튿날 개최된 쿼드 정상회담에 연이어 참석하였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중국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에 동참하였음. 한편 쿼드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인프라 분야에 향후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외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내 개발도상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음.
- 한편 5월 쿼드 회담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비난은 최소화되었는 바, 이는 러시아로부터 각종 무기를 수입하고 최근 값싼 러시아산 석유를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등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인도를 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인도는 1950년대 냉전 시대부터 러시아산 무기를 수입해 온 세계 최대의 러시아산 무기 수입국으로, 2021년 12월 모디 총리는 인도를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국방·무역·에너지·우주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음. 또한,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지난 3월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기권한 바 있음.

파키스탄과는 긴장관계 지속

-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을 놓고 오랜 갈등을 겪어 왔음. 2019년 2월 동 지역에서의 자살 폭탄 테러로 인도 경찰요원 44명이 사망하자,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군기를 투입하여 파키스탄 내 테러 근거지를 공습하였으며, 파키스탄도 대응사격을 하는 등 48년 만의 공중전이 벌어지면서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었음.
- 카슈미르 지역은 현재 파키스탄(서쪽)과 인도(동쪽)의 분할통치를 받고 있음. 인도(힌두교국) 소속 자치구인 잠무-카슈미르 지역은 주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으로, 인도로부터의 분리독립 운동을 지속하여 왔음. 2019년 8월 인도 정부가 잠무-카슈미르 지역의 자치권을 폐지하자, 파키스탄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였음.
- 2021년 2월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카슈미르 지역에서 양국의 실효 지배구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인 정전 통제선(Line of Control)에서 모든 무력 행위를 중단하기로 하는 정전 합의를 발표하였으며 2021년 3월에는 양국이 인더스 강의 수자원 공유 문제에 대한 논의의 진행을 위해 ‘인더스 영속 위원회(Permanent Indus Commission)’를 개최하는 등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3,200km 길이의 인더스 강은 히말라야 북쪽에서 발원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등을 거쳐 파키스탄 본토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양국은 인더스 강 수자원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왔음. 역사적·종교적 갈등에서 비롯된 양국의 오랜 긴장 관계가 금번 정전합의로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

외채상환태도

대외 채무재조정 경험 없으며, ECA 앞 연체비율은 미미한 수준

- 인도는 파리클럽을 통한 대외 채무재조정 경험이 없음. 한편, 2022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들의 인도에 대한 여신잔액은 166.6억 달러(단기 47.3억 달러, 중장기 119.3억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1.5억 달러로 연체비율(0.9%)이 미미한 수준임.
- * 캐나다(39.9억 달러), 한국(35.1억 달러), 독일(22.3억 달러), 프랑스(21.2억 달러), 일본(12.8억 달러) 등 24개 ECA 잔액 보유
- 미 수은, 영국 UKEF 및 독일 Hermes는 인도에 대해 공공·민간 부문 모두 만기 제한 없이 인수 가능하다는 입장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22.06)	3등급 (2021.06)
Moody's	Baa3 (2020.06)	Baa2 (2017.11)
Fitch	BBB- (2006.08)	BB+ (2004.01)

투자적격등급은 유지 중이나, 코로나19 이후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고조

- OECD는 인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3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Moody's 등 국제신용평가 3사는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낮은 수준(BBB-)을 유지하고 있음.
- Moody's는 2020년 6월 경기 침체에 따른 정부의 경제 개혁 지연 우려, 재정건전성 악화 및 은행권 부실 증가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평가등급을 종전 Baa2(Negative)에서 Baa3(Negative)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바 있음. 한편, 2021년 10월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부터의 빠른 회복, 금융 기관들의 자본확충과 높은 유동성 비율은 금융 부문의 위험성을 낮추었다고 평가하면서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Fitch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성장 모멘텀 둔화, 공적채무 증가 경향 등을 들어 2020년 6월에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였으나, 2022년 6월에는 빠른 경제 회복과 금융 부문 부실 위험성 감소 등을 이유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인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봉쇄조치의 여파로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됨에 따라 사상 최저 수준의 성장(-6.6%)을 기록하였음. 2021년에는 백신 보급에 따른 민간 소비심리 회복, 주요 수출상대국의 경기 회복, 외국인투자 유입 및 기저효과 등으로 8.9%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2022년에는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과 주요 선진국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에 따른 루피화 가치 하락 등으로 전년보다는 소폭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는 외채구조와 외환보유액 모두 안정적인 편이며, 젊고 풍부한 노동력과 비교적 다변화된 산업 등을 기반으로 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단,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코로나 대응 지출에 따른 정부 재정적자 확대 및 공적채무 증가 경향 등은 주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성장 저해요소로 지적받고 있음.
- 모디 총리의 연임으로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2024년 임기 종료시까지 제조업 육성,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 경제개혁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단,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된 농업개혁법이 농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철회되는 등 개혁에 대한 저항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됨.
- 에너지 등 원자재 국제 가격 안정화, 정부재정 및 은행산업 건전성 강화, 인프라 확충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기 부양 등이 인도의 장기 성장 및 대외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